

기시다, 각료 14명 교체...아베파 배려

5명 유임...아베 전 총리 동생 교체 지지율 급락 인적쇄신으로 국면전환 파벌 균형 유지...당직 비주류 약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각료 19명 중 14명을 물갈이하는 대폭 인사를 단행한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살해 이후 구심점을 잃은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에 대한 대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를 배려해 당내 결속 강화를 꾀한 인사를 선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방위상·경산상 등 교체...외무상·관방장관 유임**=지난달 총격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다 노부오 방위상(아베파·이하 소속 파벌)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아베파) 등 14명의 각료가 교체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기시다파)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아베파) 등 5명의 각료는 유임된다.

교체되는 14개 각료 자리에 데라다 미노루(총무상·기시다파) 등 9명의 의원이 처음 입각한다. 나머지 5개 각료 자리는 입각 경험자로 채워진다. 후임 방위상으로 2008-2009년 방위상을 지낸 하마다 야스카즈(무파벌) 중의원이 기용된다. 방위상과 방위청 부장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장 등을 지낸 12선의 안보 분야 전문가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에(무파벌) 자민당 정부조사회장이, 디지털상에는 고노 다로

(아소파)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재입각한다. 두 사람은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쟁한 인물이다.

각료 19명의 소속 파벌을 보면 아베파(97명·이하 소속 국회의원)와 3위인 아소파(50명)가 각 4명, 2위인 모테기파(54명)와 4위인 기시다파(43명)가 각 3명으로 파벌 간 균형을 유지한다.

2차 내각과 비교하면 아베파와 기시다파 각료 수는 그대로인 반면 아소파는 1명 늘고 모테기파는 1명 줄어든다.

기시다 방위상과 하기우다 경산상 등 통일교외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7명의 각료가 교체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 **당내 파벌 균형 유지...당직 인사에서 비주류 배려**=자민당 요직 인사는 당내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비주류를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당 4역 중 모테기파의 수장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유임되고,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정조회장에는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하기우다가 임명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파 내에서 발언력이 있는 하기우다의 정조회장 기용에 대해 "방위력 강화와 재정 지출 방식 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조율을 담당해 해 당의 불안정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엔도 도시아키(다나카그룹) 선거대책위원장은 총무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선대위원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모리아파) 총무회장 대행이 임명된다. 당 4역 중 두 자리를 비주류에 배정해 당내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는 유임된다.

◇ **장기 집권 노리는 기시다...아베파 이반 경계**=이번 인사에서 가정연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베파는 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정권 안정을 위해 아베파를 배려했다.

가정연합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기시다 방위상을 교체하면서도 안보담당 총리보좌관으로 기용하는 한편, 하기우다 경산상을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발탁해 아베파가 당 4역 중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게 했다.

교도통신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당내 배려를 우선시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와 보수층의 이반을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인사를 통해 자신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권 내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다음 달 초순 개각과 당직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자민당 의원과 가정연합 간 연관 논란,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 논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면 타개를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1.0%로 직전 조사 대비 12.2%포인트 급락했고, 요미우리신문의 이달 5~7일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7%로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자들 FBI 압수수색 항의 시위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 앞에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연방수사국(FBI)이 압수 수색을 성토했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중견제' 반도체산업육성법 서명

美 반도체 산업 366조원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던,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지지율 40% 탈환... "입법 연승 덕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연달아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로 추진한 법안이 연달아 의회를 통과한 데 힘입어 지지율이 40%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05명에게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이는 5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36%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지지율도 39%에 그치며 4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달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8%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는 지난달보다 9%포

인트 오른 것이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12%에 그쳐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 줄줄이 의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로이터는 풀이했다.

앞서 상원은 7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했다.

9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이 지난달 의회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은 지난해 8월부터 인플레이션 대란,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 등에 휘말려 50%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크림반도 러시아 공군 비행장 치솟는 연기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병합지역인 크림반도 노보페도리우카 인근의 사키 공군 비행장 방향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군기지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으나 인명 및 항공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독일·영국·유럽 의회

대만 방문 줄 잇는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연내 독일·영국·유럽의회 의원단의 대만 방문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고 대만 자유시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대표단이 10월 말,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11월 또는 12월 초,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이 12월에 대만을 찾는다.

독일 대표단은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 사회당(CSU) 연합 등 6개 원내 정당 소속 의원 8명으로 짜인다. 이들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꺾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는 2020년에도 대만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취소한 바 있다.

영국 하원 외교위 대표단도 올해 초 대만을 방문하려 했으나, 대표단 중 의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1월 또는 12월 초로 대만 방문이 미뤄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라인하르트 부티코퍼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대만 간 투자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